

<IMF 아태국장 인터뷰> "북핵,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재송)

[채권] 2006/10/16 11:29

-'넘치는(ample)' 외환보유고, 韓 경제 회복에 기여

-韓銀, 인플레이 타깃팅 정책 성공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유철.박승영.박옥희기자=데이비드 버튼(David Burton) 국 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북핵 사태와 같은 중요한 지정학적 이벤트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면서 "그러나 북핵사태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 경제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버튼 국장은 16 일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 "확실히 넘치는(ample) 한국의 외 환보유액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며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물음은 답하기에 복잡하지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7 개월치 수입 총액과 맞먹고, 이는 적정 완충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3 개월 어치의 양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 입장에서 현 4.50% 수준인 한국은행의 콜금리 수준에 대해 그렇게 낮 지도 않고, 그렇게 높지도 않은 중립적인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며 "4.50%의 콜금리 수준이 경제의 잠재성장을 달성과 인플레이션 제어를 도울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 다"고 강조했다.

버튼 국장은 한국의 개인 부채와 관련,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이 140%나 되는 것은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제법 높은 것"이라며 "게다가 이 부채의 대부분이 단기 부채로 되어, 경제가 둔화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연장하기를 꺼리면 서 소비를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둔화가 '신용위기(credit crunch)'로 가 지 않게 금융기관 간에 신용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버튼 국장은 또 연금부분에 있어 신속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히 보 건과 장기적인 보호 비용이 증가하고, 연금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금제도를 변화하지 않는 이상 자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행동 특히 연금제도에서의 신속한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개선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버튼 국장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 "건조한 소비 증가와 전 자제품 주도의 수출을 바탕으로 올해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국내의 소비 회복이 정점으로 무르익으면서 국내 수출은 선진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약화하고 성장률은 내년 4.5%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전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며 "미국의 성장둔화와 고유 가, 타이트한 금융시장 여건 등이 리스크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환율 유연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중국경제에 이득이 될 것" 이라며 "환율 유연성 확대는 투자의 범위와 신용 성장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버튼 국장은 영국 태생으로 1972년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76년 맨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그리고 1979년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1년 IMF에 이코노미스트로 입사, 이후 수석이코노미스트등을 거쳐 2002년부터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으로 재직중이다.

yckim@yna.co.kr

parksy@yna.co.kr

okpark@yna.co.k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데이비드 버튼 IMF 아태국장 인터뷰 일문일답>(재송)

[채권] 2006/10/16 11:33

(서울=연합인포맥스) 데이비드 버튼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북한 핵실험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데이비드 버튼 국장과 1문 1답

--IMF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한국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책은 무엇인가.

▲북핵사태가 한국과 아시아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이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크게 밀렸으나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탄력성에 대한 큰 신뢰를 반영한다. 북핵 사태와 같은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영향이 크고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한국 당국은 금융과 경제발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책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4.50% 수준인 한국은행의 콜금리 수준이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한국 경제 부양을 위한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저금리의 폐해는 없다고 보는가.

▲IMF는 현 4.50% 수준인 한국은행의 콜금리 수준에 대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중립적인 수준으로 여기고 있으며, 4.50%의 콜금리가 경제의 잠재성장을 달성과 인플레이션 제어를 도울 수 있다는 한은의 견해를 지지한다. 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 정책을 매우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이 정책은 강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국의 경기확장 속도가 완화되고 있으나 성장세는 강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6년 가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IMF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4%로 예상했고 내년에는 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균형잡힌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도 미 경제에는 하강 리스크가 존재한다. 미 주택시장은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고 이는 소비와 주택 투자를 둔화시키겠지만 기업 투자는 강한 기업 수익을 배경으로 호조를 지속할 것이다. 최근 유가 하락 역시 성장을 지지할 것이다.

한국의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다. 성장은 견조한 소비 증가와 전자제품 주도의 수출을 바탕으로 올해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회복이 정점에 달하고 수출이 선진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약화돼 내년 성장률은 4.5%를 밑돌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전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미국의 성장둔화와 고유가, 타이트한 금융 시장 여건 등이 리스크 요인이다.

--IMF 내에서의 한국의 의결권 확대가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반영한 다고 생각하는가.

▲ 물론 IMF에서 한국의 분담액을 늘리기로 한 결정은 세계경제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한다. 지난 50년 간 한국이 놀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실제로, 한국은 IMF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 전, 처음으로, 한국인이 IMF 이사로 선출됐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부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가해도 될 것으로 보나.

▲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신중한 재정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GDP 대비 공공부채가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이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리 높은 것이 아니다. 2007년 예산안에서 한국 정부는 부채 대비 GDP 비율을 중기적으로 30% 정도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IMF도 이 목표를 지지한다. 이는 연간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부채가 GDP의 1%보다 낮게 유지돼야 함을 의미한다. 부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다. 특히 이로 인해 국가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지출 압력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좋다. 특별히 보건과 장기적인 보호 비용이 증가하고, 연금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금제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자산 고갈될 것이다. 신속한 행동 특히 연금제도에서의 신속한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선이 이뤄지면 미뤄 질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국의 개인부채가 너무 높은가. 이는 향후 한국의 경제 개혁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 한국의 가계들은 신용카드 부채 붐과 이은 붐괴로 인한 금융사정 악화를 회복 하는 데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최근 가계 대출이 다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는 주로 주택관련 대출에 의한 것이다. 한국 당국이 현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0%나 되는 것은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제법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부채의 대부분이 단기 부채로 경제가 둔화하면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꺼리면서 소비를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둔화가 신용위기로 치달지 않으려면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 공유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천 25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중, 미국 국채에 투자된 규모가 최근 68억 9천억달러에 달했다. 한국은행의 미국국채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확실히 풍부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7 개월치 수입 총액과 맞먹고, 이는 적정 완충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3 개월 어치의 양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비슷하게, 한국의 외환보유 액은 적정수준을 논할 때 사용되는 총 단기 외채를 쉽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란 복잡하다. 그러나 확실히 풍부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IMF 는 최근 위안화가 절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경제에 긍정적일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위안화 절상 압력은 얼마나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조정이 얼마만큼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가.

▲ 작년 7 월 재평가 때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2% 평가절상된 후 완만하게 절상 돼 왔다. 중국 당국은 올초 외환시장의 기능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추가 정책을 단행했고, 위안화가 더 빠르게 절상되고 최근 몇 주간 위안화의 유연성이 확대됐다. 중국 당국은 새로운 환율 조정 하에서 위안화의 유연성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환 율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이득이 된다. 환율 유연성 확대는 투 자의 범위와 신용 성장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높인다. 투자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일부 부문에 과잉설비가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이 감소하고 은행 시스템의 무수익여신(NPL)이 늘어난다. 환율 유연성은 중국 정부의 중기 목표인 투자와 수출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 성장을 균형 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서비스> <버튼 IMF 아태국장 단독 인터뷰>(영문)

[기타] 2006/10/16 09:50

※다음은 데이비드 버튼(David Burto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인터뷰 전문입니다.

--What is the IMF's view of the possible impact of North Korea's recent nuclear test on South Korea and the region? What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polic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o stabilize the economy and maintain the growth momentum?

▲ We do not anticipate that this event, in and of itself,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economy of South Korea or on the region more generally. Financial markets dipped on the day following the tests, but recovered quickly. This reflects in large part the confidence that the investor community has in the resilience of the Korean-and more broadly the Asian-economy. We acknowledge that important geopolitical events such as this one can influence consumer or business confidence and, in this way, affect growth in the short-run. But we would not expect such an effect to be large or long-lasting. The Korean authorities, however, are monitoring finan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closely and are prepared to take policy action if necessary.

--It is evaluated that an age of low interest rate has settled i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Do you think the call rate of 4.50% is sufficient to bring South Korea up as an economic powerhouse, considering the nation's inter national status under the efforts to go towards an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y? Are there any side effects to low interest rates?

▲ The authorities consider the current interest rates to be at a broadly neutral level-not too low and not too high-for an economy that is growing at its potential and with inflation remaining subdued. I support that view. More generally, I believe the Bank of Korea has been very successful in implementing its 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and this bodes well for maintaining strong growth with low inflation.

--There a split opinion that the economic growth rate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of South Korea's is lagging.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 The pace of expansion in the United States is moderating, but growth is expected to remain reasonably strong. In the Fall 2006 WEO, the IMF projected US growth of 3.4 percent this year, slowing to just under 3 percent in 2007. The risks on balance, however, are on the downside. The US housing market is cooling rapidly, and this is expected to slow consumption and residential investment. However, business investment should remain solid against the backdrop of strong profits; the recent drop in oil prices should also help support growth.

Korea's growth prospects are good. Growth should reach about 5 percent this year, with solid consumption growth and robust export performance, especially in electronics. As the consumption recovery matures and exports moderate in line with the slowdown in industrial countries, the economy is expected to decelerate to a bit below 4½ percent in 2007. As always, there are risks to this outlook, mainly from slower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 rebound in oil prices, and tighter global financial market conditions.

--Do you think South Korea's expansion of its voting rights within the IMF is reflecting the country's stance in the world's economy?

▲ Certainly, the decision to provide an ad hoc quota increase to Korea reflects a recognition of its growing importance in the global economy. The country's extraordinary economic performance over the last five decades suggests that you have much insight to offe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eed, Korea has alread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decision-making at the Fund. For example, the last two years, for the first time, Korea has had an Executive Director heading its constituency at the IMF.

--Considering the South Korea's economic situation, what percentage could the financial deficit rise in comparison to the GDP without hurting the economy?

▲ The Korean government has, over many years,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fiscal prudence. Because of this, its public debt, at just over 30 percent of GDP, is not very high by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2007 draft budget,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aims to maintain the debt-to-GDP ratio at around 30 percent over the medium term, an objective that we support. This would mean that the deficit ex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Fund would need to be kept below 1 percent of GDP annually. Keeping the deficit low is good policy, in part because it will create the much-needed "fiscal space" to begin addressing expenditure pressures that will build up with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n particular, health and long-term care costs are expected to surge, and pension costs are expected to rise and would eventually deplete the assets of the pension system without a change in key parameters. I would emphasize here that prompt action, especially on pensions, is important because the longer corrective actions are delayed, the more painful these measures would be.

--Are the South Koreans' personal debts too high? Do you think it would add on pressure to the nation's economic reformation in the future?

▲Korean households have made great strides in repairing their financial positions following the boom in credit card debt and its subsequent collapse. But households have recently started borrowing again rapidly, this time mainly for housing. The authorities are right to be monitoring the situation closely, in particular because the ratio of debt to disposable income, at 140 percent, is quite high by international standards. Moreover, much of this debt is short-term and an economic downturn could make banks reluctant to roll over loans, which could further impact consumption. For this reason, we see as important steps to enhance the flow of credit informa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so that any such slowdown would not lead to a "credit crunch."

--According to the recent data from the Bank of Korea, the total of South Korea's foreign currency holdings adds up to US\$ 225.7 billion. Do you think such the volume is adequate? Among South Korea's total foreign currency holdings, the U.S. government-issued bonds has recently reached US\$68.9 billion. Do you think the amount is rather excessive?

▲Foreign reserves in Korea are certainly ample when measured by standard indicators. For example, foreign reserves in Korea cover more than seven months of imports,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three months often used as a bench mark for reasonable buffer. Similarly, foreign reserves in Korea easily cover total short-term external debt, another indicator we use. Of course, the question of what is an optimal level of reserves is a complex one. Certainly, the large reserves in Korea, as in other countries in Asia, have contributed to the resilience of the economy.

--You recently told that the Yuan should be re-evaluated. Do you think such initiatives would be a positive push to the Chinese economy? If so, why? How long do you think the pressure of the Yuan re-evaluation would continue? How much adjustment is necessary for a soft landing of the Chinese economy?

▲Since the reforms of last July, the renminbi has appreciated modestly against the dollar after the initial 2 percent revaluation. The authorities have taken additional steps earlier this year to further improve the functioning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we have seen a faster pace of appreciation and increased flexibility in the renminbi in recent weeks. The Chinese authorities should utilize more fully the flexibility available under the new exchange rate arrangement. Greater exchange rate flexibility continues to be in China's best interest. Increased exchange rate flexibility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to help ensure that the pace of investment and credit growth is contained. There is a risk that if investment continues to grow rapidly, it could lead to overcapacity in certain sectors, which, in turn, could lead to the falling prices, lower profitability, and new nonperforming loans in the banking system. Added exchange rate flexibility will also be key in helping to meet the government's medium-term objective to rebalance growth away from investment and exports and towards greater reliance on consumption.

yckim@yna.co.kr

parksy@yna.co.kr

okpar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